

ISSN 2734-0686

국제전략 Foresight



Vol. 02
2020. 11. 05

www.nafi.re.kr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SSN 2734-0686
발행일 2020년 11월 05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수시 발행하는 브리핑형 심층 보고서로서, 미래연구원 내·외부 전문가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래를 전망하고 국가차원의 국제전략을 제시합니다.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¹⁾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

- I. 미·중 무역 전쟁과 뉴노멀의 등장
- II. 한국의 대외 통상전략
- III. 한국의 대외 금융전략
- IV. 한국의 대외 통화전략
- V. 한국의 개발원조 (ODA) 전략
- VI. 결론

참고문헌

1)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저자가 대표로 정리 및 편집한 것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극심한 경제적 대결은 세계 경제에 뉴 노멀 (a new normal)을 만들고 있다. 과거에 국가 간의 공동의 이익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된 무역이 이제는 상대방의 반강제적 행위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뉴 노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폭증시키고 있다. 한국은 이런 불확실한 세계 경제 환경을 배경으로 핵심적 경제 국익 즉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한다.

본 글은 뉴 노멀이라는 환경적 제약하에서 한국의 경제적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른바 국가 경제전략(economic statecraft)을 전략적 관점에서 도출하고 있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이 환경제약에 현명하게 대응하여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국제 통상, 금융, 통화 그리고 개발원조 분야에 걸쳐 도출하고 이것이 중장기 한국 경제이익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I. 미·중 무역 전쟁과 뉴노멀 (a New Normal)의 등장

해외의존형 경제체제를宿命적으로 가진 한국의 대외경제전략 (foreign economic strategy)은 세계경제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다. 과거 한국은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성립 유지된 속에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발(發) 금융위기는 1945년 이래 구축되고 유지된 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의 위기와 거대한 변환을 가져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결정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권력 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기존 질서가 동요하고 혼란에 빠지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즘(Trumpism)과 같은 경제적 포퓰리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마찰과 첨단기술 경쟁은 2008년 위기를 기점으로 분출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제경제 질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대표되는 매우 갈등적 상황에 놓여있다. 과거 국제관계의 평화의 엔진이라 추앙받던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도 경제적 상호의존을 외교·안보의 수단으로 보면서 상대방의 행위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무기로 사용하는 이른바 뉴 노멀 (a new normal)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뉴노멀이라는 환경제약 하에서 경제적 국익의 핵심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 핵심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행동계획이 바로 한국의 대외경제전략이다. 본 글에서는 미·중 경제전쟁으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 하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들을 통상, 금융, 통화 그리고 개발원조 (ODA)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대외 통상전략

한국은 대외시장 의존도가 매우 강한 수출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국익달성을 위한 통상전략의 개발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통상환경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역의 무기화 (weaponization of trade)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국가 간 경제 관계에서 ‘금도’로 여겨지던 경제적 상호의존이 어떻게 무기화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줬다. 안보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이 현상은 미·중 무역 전쟁 이외에도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금수 조치,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한국 수출 통제 조치 등에서도 관찰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대외 통상전략 개발이 절실하다.

이 전략의 핵심은 무역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한국의 지나친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한 반도체 산업 핵심소재 의존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아울러 핵심소재의 국산화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전략물자의 수입 선 다변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메가 FTA 적극적 참여전략이다. 미·중무역전쟁과 별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이 일본주도로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 결정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²⁾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비하고 아시아 경제통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CPTPP 가입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대비전략도 필요하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 경쟁으로 전화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기존 규범과 규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미·중 경쟁이 위치한다. 자국기업을 위해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미국의 패러다임과 ‘인터넷 주권’을 강조하는 중국의 패러다임이 경쟁하고는 것이다.³⁾ 따라서 한국 역시 디지털 무역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 본 경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형성중인 디지털무역 거버넌스와 국내 제도와의

2) 세계 무역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ichard Baldwin, "WTO 2.0: Governance of 21st century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9, No. 2 (2014), pp. 261-283.

3) 이승주, "디지털 무역 질서의 국제정치경제: 디지털 무역전략의 차별화와 갈등 구도의 복합성" 『동북아 논총』 25권 2호 (2020), pp. 53-54.

조화를 추진해야한다. 국내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내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수립된다는 면에서 국내적 차원의 디지털 경제전략과 대외적 차원의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사이의 정합성을 재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자-다자 무역의 연계 전략도 추진되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 전략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다른 강대국인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전선을 공고히 하려는데는 유리하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위험이 크다. 이미 세계 무역질서는 수많은 무역자유화 협정과 WTO라는 국제레짐에 의해 제도화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양자주의에 기반해 기존의 FTA전략을 추진하되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나 중국이 추진할 다자무역레짐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 기반 협력 추구 전략이 필요하다, 선진 강대국과 같은 물질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이 대외 경제 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원칙은 자유무역원칙 준수와 상호 호혜성 (reciprocity)이다. 무역 전쟁의 와중에도 한국이 이러한 원칙하에 무역 대상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 트럼프 정부 이후의 국제경제질서에도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에 이런 자비로운 자유주의 중견국의 이미지는 한국과 동반성장의 기대를 높여 국제경제영역에서의 한국 위상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div style="background-color: #009688; color: whit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border-radius: 10px;"> <p>무역의 무기화 (Weaponization of Trade)</p> </div> <p>무역의 무기화란 국가 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진행 중이던 무역 관계를 특정 정치적 혹은 안보적 목적을 위해 역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명 경제 치국 술 (economic statecraft) 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군사력 사용의 결과가 어느 때보다 파괴적인 세계화 시대에 인명 피해 없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무역보복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가들이 빈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009688; color: whit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border-radius: 10px;"> <p>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p> </div> <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무역 파트너십으로 불리는 CPTPP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그리고 싱가포르와 베트남간의 무역 협정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된 환태평양 파트너십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탈퇴하자 이 불씨를 살려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역내 자유무역질서 추진을 위해 만들어낸 다자무역협정이다.</p>
--	---

Ⅲ. 한국의 대외 금융전략

개방경제인 한국에 있어 대외 금융전략의 핵심은 국제금융질서의 안정화 전략에 집중되어야 한다.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은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한국은 국제금융질서의 안정화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뼈저린 교훈으로 얻었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 금융전략의 핵심은 국제금융질서안정을 위해 각국이 만든 주요 금융 안정화 기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질서의 안정화를 위해 G-20,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글로벌금융규제기관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기관 내부의 외교에서 금융안정화가 퇴보가 아닌 강화되는 방향으로 규칙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회원국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 외부의 금융안정망 확충전략 역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도출된 금융안정성 확보 전략이 예방형 전략이라면 금융안전망 확충전략은 금융위기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여 금융위기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IMF,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인 금융안전망 확보 기구이다. 따라서 두 기구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치앙마이이니셔티브가 동아시아 지역 금융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 정책 담론과 아이디어 제공, 회원국 간 의견대립 조정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⁴⁾

세 번째 전략은 양자 간 통화협정 강화 전략이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는 다자간 통화교환 협정이므로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요 통화국과 양자간 통화교환협정 구축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주요 통화국과의 통화교환협정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할 때 금융안정을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타국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주요통화국인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과의 협정을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 전략은 금융시장 확대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투자에 필요한 원활한 자본의 공급에 적극 나서자는 전략이다. 특히 기존의 아세안+3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에 적극 출자하여 동아시아

자본시장을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자체가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국 중소기업의 자본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과 이를 통한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잠재력이 충분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⁵⁾

다섯 번째로 미래지향적 디지털 금융외교 강화 전략이다. 세계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페이팔 (Paypal)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자산운용, 모바일 대출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한 종합 플랫폼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여 디지털 국제금융 규범 형성에 한국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hiangmai Initiative)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아시아의 특정 국가에서 외환 부족 사태 등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IMF 등 국제 기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여 스스로 위기에 대응 하자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0년 3월에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10개국과 대한민국, 중국, 일본 3개국이 금융 및 외환위기 발생 시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화 교환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2000년 5월 6일 타이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치앙마이 협정으로도 불린다.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금융안정 위원회 즉 FSB는 2008년 월가발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탄생한 국제적 금융안정화 감독 기구이다. G-20국가들의 정상들의 합의로 주도된 이 위원회는 이전의 금융안정포럼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국제금융의 취약성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할 정책을 개발 하며 아울러 상시적인 국제금융 안정에 대한 감시 (monitoring)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가 간 조약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 보니 채택된 의견의 강제성이 없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금융위기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놓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이용욱, "경제위기, 지역협력의 제도화, 융합과정모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평화연구』 제23집 제1호 (2015), pp. 263-264.

5) 이용욱,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금융협력-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의 형성과 발전," 『세계정치』 제15집 (2011), pp. 91-92.

IV. 한국의 대외 통화전략

앞으로 다가올 국제 통화질서는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지만 중국이 달러를 대체할만한 정도의 통화 권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다중통화체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환율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증폭되며 국제통화체제는 갈등적 분권 체제로 귀결되고 통화 불안정성 역시 증폭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통화전략은 환율의 적절한 안정성 확보에 그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지나치게 고평가된 통화는 국내 구매력을 증진 시켜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국제무역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어 수출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저평가된 통화는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수입에 악영향을 주어 국내 소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절한 환율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율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어적(defensive) 통화전략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방어적 통화전략은 자국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외적 압력을 일정 정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방어적 통화전략은 핵심은 자국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이 대외적 압력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⁶⁾ 물론 공격적(offensive) 통화전략도 존재한다. 공격적 통화전략은 타국의 정책과 행동을 변경하여 자국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통화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화강대국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다.

방어적 통화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여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외환보유고는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이 야기할 수 있는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예비저축(precautionary saving)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야기할 수 있는 통화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해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개별 국가들이 축적한 외환보유고만으로는 대규모 유동성 위기를 완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6) Leslie Elliot Armijo and Saori N. Katada, "Theorizing the Financial Statecraft of Emerging Powers," *New Political Economy* Vol. 20, No.1 (2015), pp. 46-47.

두 번째 대외 통화전략은 자본통제(Capital Control) 또는 자본관리조치(Capital Management Measure)를 실행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IMF가 인정한 것처럼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입으로 인해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금융 불안정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자본유입에 일정한 통제를 부과하는 것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⁷⁾ 하지만 자본통제의 부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지위 또는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즉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낙인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자본통제 또는 자본관리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방어적 자본통제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해외에 어필하고 이 조치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금융외교 강화 전략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환율은 국제금융상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국이 한국의 실정에서는 더욱 다자금융외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G-20, G-7 등 각종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개방된 국제경제질서에서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주요 상대국들의 지지가 없이는 국익에 맞는 통화전략 일관되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금융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상대국들에게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V. 한국의 대외 개발원조 (ODA) 전략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정책 역시 미·중 패권 경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발생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내부에서 대중국 무역의존도 탈피에 대한 인식공유와 함께 아세안에 대한 관심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은 이미 현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신남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신남방정책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신남방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 예산을 2023년까지 200% 증액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경우 2019년 870억 원에 달하는 아세안 지역 국가에 대한 ODA는 2023년 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 Jonathan D. Ostry, et al, "Capital Inflows: The Role of Controls." IMF Staff Position Note 12 (23) (2010), pp. 14-15.

이러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인 0.31%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인 비판과 함께 ODA 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OECD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에 부합하도록 한국의 글로벌 공공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하에 한국은 중장기 ODA 전략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

가장 먼저 ODA 규모의 선도적 증액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미·중 패권경쟁은 양 진영의 동맹국들에게 ODA전략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식 헤게모니 확산을 위해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⁸⁾ 반면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워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미·중 경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인 한국의 ODA 규모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ODA 유·무상구성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외부 압박에 따른 ODA 규모 증액은 한국 원조의 유무상 차관 구성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한국의 ODA에서 유무상 비율은 현재 무상 약 60%, 유상 약 40% 수준으로 과거 50:50 수준에서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 및 안보적 국익 실현으로 ODA 활용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외부적 요소로 인해 단시간 내에 ODA 규모의 비약적 증가가 요구될 때 무상보다는 유상 차관의 비중을 높이고 혹시 모를 국제사회의 비판을 완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ODA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아직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구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산정한다면 단기간에 ODA 규모를 증액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때문에 타 대륙 및 지역에 대한 ODA 사업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ODA만 확대 전략이 모색될 수 있다. 즉, 전체 규모에 대한 증액은 기존의 평균 증가율을 유지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남방 대상 국가로 ODA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ODA 포트폴리오 (portfolio)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ODA구조에서 유상 ODA를 증액할 경우 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8) 오윤아 외, “아세안·중국 경제관계의 심화와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집 2호 (2017), pp. 11.

민간의 개발자원 참여를 확대하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즉 민간기업이 가진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같은 개발재원과 ODA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리스크를 낮추는 이점,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의 재원을 ODA 사업에 끌어들이 수 있는 이점을 살려주는 전략이다.

신남방 정책

아세안과 인도 등 그동안 한국 외교에서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략이다. 그 핵심 개념은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 번영(Prosperity) 공동체 발전이며 한국의 외교 다각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DAC**

OECD의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이란 OECD 회원국 중 주요 개발원조 공여국 (donor)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개도국의 원조, 발전 그리고 빈곤퇴치에 관한 이슈들을 토론하는 일종의 다자간 포럼이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및 오스트리아, 캐나다, EU, 한국, 일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VI. 결론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은 미·중 무역경쟁으로 대변되는 대외 경제환경의 급변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아래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대외 경제전략을 세계 경제의 핵심 분야인 통상, 금융, 통화 그리고 개발원조 분야에 초점을 두어 도출하였다.

각 분야 간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전략을 관통하는 공통된 원칙은 양자 및 다자전략의 적절한 혼용이다.

미·중 무역경쟁이 촉발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강대국들과 비슷하게 양자 통상전략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역내 자유무역협정에도 관심을 두어 다자주의적 행보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 금융전략과 관련해서도 양자 간 금융외교 강화 전략과 함께 다자간 금융안정확충 움직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화 역시 양자간 통화협력 강화와 다자간 통화협력 기금에의 좀 더 큰 기여를 전략으로 도출하였다. 개발원조 역시 한국이 대미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하되 아세안이라는 다자적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한 좀 더 과감한 개발원조 제공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공민석. 2018.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2007-08년 금융위기: 미국의 통화·금융권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 (4): 131-156.
- 김진영. 2018.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 『21세기정치학회보』 28 (3): 139-164.
- 오윤아 외. 2017. “아세안·중국 경제관계의 심화와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7 (2): 1-166.
- 윤성욱·신지연. 2017. “중국 통화굴기와 정책의 한계.” 『유라시아연구』 14 (2): 81-101.
- 이승주. 2018. “미중 경쟁과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의 국제정치경제.” 하영선·김상배(편). 『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서울: 한울아카데미.
- _____. 2020. “디지털 무역 질서의 국제정치경제: 디지털 무역 전략의 차별화와 갈등 구도의 복합성.” 『동북아 논총』 25 (2): 53-80.
- 이용욱. 2016. “한국의 중견국 금융외교: G20을 통해 본 가능성, 한계, 그리고 역할의 모색.” 국가전략 22 (2): 61-94.
- _____. 2015. “경제위기, 지역협력의 제도화, 융합과정모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평화연구』 23 (1): 261-294.

- _____. 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금융협력-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의 형성과 발전.” 『세계정치』 15: 83-110.
- 차혜경. 2019. “바젤 III 규제 개혁안 도입에 관한 최근 이슈 검토: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15 (2): 283-303.
- Armijo, Leslie and Saori N. Katada. 2014. “Theorizing the Financial Statecraft of Emerging Powers.” *New Political Economy* 20 (1): 42-62.
- Baldwin, David Allen. 1985.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ldwin, Richard. 2014. “WTO 2.0: Governance of 21st century trade,”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9 (2): 261-283.
- Bergsten, C. Fred. 2016. “We Are All Geoeconomists Now.” *Foreign Affairs* (May/June): 1-11.
- Broz, J. Lawrence and Jeffry A. Frieden. 2002.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 (1): 317-343.
- Drezner, D. W. 2014. *The System Worked: How the World Stopped Another Great Depres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llley, Bruce, and Andrew O’neil. 2014. *Middle Powers and the Rise of China*.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stry, Jonathan D. et al., 2010. “Capital inflows: The Role of Controls.” *IMF Staff Position Note* 12 (23): 1-30.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